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지난달 146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종합주가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원화...

멀리 보고 안정적 투자해야 실패없다

공격적인 단기투자 수익나기 힘들어
시장 연연 말고 재무계획 따른 투자를

이렇게 투자환경이 변하다보니 실제 재무상담을 하다보면 자산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치 생물처럼 변하는 투자환경에 일일이 대응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전문가도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기투자는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장기투자는 안전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점적으로 재무계획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투자패턴이다.

단기투자를 공격적으로 해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복리효과를 거의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패턴에 비해 많은 차익을 남기기 어렵다. 오히려 투자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 원금 대비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출을 받아 분양권을 매입한 후 전매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때마다 대규모 펀드 환매가 일어나는 등 자신의 재무계획과는 관계없는 쫓겨다니는 투자방식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산손실로 연결되곤 한다.

법인세 축소 신고
500개사 세무조사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소득탈루 등을 통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법인 약 500개사에 대해 7월부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기 선정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부터 신고와 조사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올해 일반 정기 세무조사는 2005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신고분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지만 조기 선정은 2006 사업연도 신고분을 분석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말까지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5월까지 신고내역을 조기에 검증, 불성실 신고형의가 드러나면 7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기 세무조사 선정 법인수는 올해 약 500개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은행권 수수료 내린다지만
국민은행 6년간 36% 올려

국민은행을 필두로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새 은행 수수료가 3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서비스의 물가 상승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금융서비스 물가지수(2000년=100)는 116을 나타내 6년여 만에 16%가 올랐다. 이 가운데 은행서비스 물가지수는 136으로 상승률이 36%에 달했다.

은행서비스 항목에는 송금,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 이용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증권서비스 물가는 25.6%가 올랐으며 보험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하는데 그쳤다.

신용카드 회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서비스 물가는 기준연도인 2000년에 비해 오히려 2.0% 하락했다.

은행의 서비스 물가상승률 36%는 같은 기간 여객운송 서비스 요금 상승률(36.8%)과 비슷한 수준이며 우편서비스 요금 상승률(29.4%)보다는 높은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 수수료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면서 "업무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여유, 수표 발행 수수료 등은 많이 올랐지만 송금·계좌이체·출금 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성 수수료는 별로 인상되지 않았고 또 각종 우대 혜택을 통해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아파트 기본건축비 올라
33평형 118만원 인상

공공택지의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은 평당 3만6천원, 중대형은 4만원씩 오른다. 33평형의 경우 기본형건축비만 고려해도 분양가가 118만8천원, 44평형의 경우 176만원 인상을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고시된 금액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는 1.0%, 철골구조는 1.1%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44만8천원(376만9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9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362개 품목의 물가변동을 고려해 3월과 9월, 연 2회 조정돼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다 택지비,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된다.

순수 천연 유기농 '아가베 시럽' 출시

아가베 선인장을 이용해 만든 순수 천연 유기농 제품인 아가베 시럽 <사진>이 출시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아가베 시럽은 당도는 설탕에 비해 30% 정도 높은 반면 열당당도지수는 3분의 1 수준인데다 설탕의 유해성을 없앤 제품으로서 장수국가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가베 시럽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지의 수입식품코너는 물론 차와 사람, 육선,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대도시 요리학원의 공식 감미료로 채택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마케팅 대행사 (주)커먼컴은 오는 17일까지 무료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2265-3030.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삼성전자는 고급 원목 질감의 신소재를 사용한 2007년형 양문형 냉장고 '지펠 컬리난(Zipel Cullinan)'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땅주인 절반 이상만 동의 받아도 수용 가능
민간 도시개발사업
내년부터 속도낸다

내년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이 완화돼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5년 7월 입법예고됐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다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

할도록 돼 있는 규정을 2분의 1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후 1년뒤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내년 3~4월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계획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총회에서 의결된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콜금리 연 4.5% ... 7개월째 동결
李한은총재 "국제 금융시장 파국 없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중국발 쇼크 등으로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금융시장이 큰 파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연 4.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콜금리 동결은 지난해 8월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된 후 7개월 연속이며, 금통위는 물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뒀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 총재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구조가 어느 한 쪽에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그런 현상을 완화하고 상쇄하는 반대 거래가 이뤄져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잘 발달해 있다"면서 "시장자체의 자동조정 기능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엔캐리 청산 우려에 대해선 "엔 캐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엔캐리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엔캐리 청산 우려에 대해선 "엔 캐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엔캐리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엔캐리 청산 우려에 대해선 "엔 캐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엔캐리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박세흠씨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박세흠(58·사진) 전 대우건설 사장이 임명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사임한 한흥수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후임으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197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작년 말 퇴임했던 박 신임 사장은 건설훈(53)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사장, 남궁석(69)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주공 사장 자리를 놓고 경합한 끝에 지난 달 사장에 내정됐다.

/연합뉴스

농촌공사 사장 임수진씨 내정

한국농촌공사 신임사장에 임수진(61) 전 진안군수가 내정됐다. 임 사장은 지난 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동안 민선 1기~3기 진안 군수를 역임했다.

신임 임 사장은 "21세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주체로 공사를 새롭게 변화시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안군 출신인 임 사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 과정 등을 수료했으며 전북도 의원, 진안군수 등을 지냈다.

/송기동기자 song@

기관장 연봉·판공비 이사회 보고 의무화

새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 ... 단체협약 공시해야

다음달부터 90여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진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그 내용을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공기업 경영진이 단체협약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공기업은 기관장의 연봉,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노조와 맺은 협약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시담당자와 관련 상공, 감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진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복리후생, 임금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상당히 많고 복잡함, 이런 내용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음달부터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기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은 사실상 공

기업 경영진들이 노조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것을 사외이사의 힘으로 막자는 취지"라면서 "협약내용이 보고되면 사외이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시장과 대중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300여개 공공기관들은 이사회 회의록,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기관장 연봉·업무추진비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공시담당자와 관련부서 상공, 감사 등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대상에는 노조와의 협약사항도 포함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Requirements,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 Includes various job openings from Recruiting Gwangju Network.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